

전남도, 광양만권 철강산업 지원 속도…848억원 투입

재정·연구개발·고용안정·인프라 등
산업 구조 고도화·기술 경쟁력 확보
지역경제 체감할 근본 대응책 추진

벼랑 끝으로 내몰린 광양만권 철강산업의 위기
를 이겨내기 위한 구체적 대응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일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에서 '제 5차 광양만권 철강산업 위기대응 협의체' 회의를 갖고 지역 철강 산업의 실태를 진단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현재 광양·순천지역 철강산업은 생산·수출액 감소세가 뚜렷하고 가동률 하락세가 지속되는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미국의 고율(50%) 철강 관세 범위 확대, 저가 중국산 공급 과잉 심화 등 글로벌 무역 리스크가 겹치면서 복합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지난 2024년(19조 5241억) 매출액은 2022년(22조 6340억)에 견줘 13.7% 감소했다.

전남도가 '철강산업 위기대응 전략 수립 연구용역' 과정에서 광양지역 중간·중소 철강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생산량을 집계한 결과, 15개 기업 중 13개(85%)의 지난해 2분기 생산량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줄었다.

2025년 3분기 기준 광양 지역 철강 생산액(4조 2997억원)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9.2% 줄었고 수출액(1조 8680억원)도 10.1% 줄었다. 실업률도 2.2%에서 3%대 중반으로 상승했다.

전남도는 이에따라 맞춤형 지원사업을 마련, 위기를 돌파하고 경쟁력 회복을 통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광양의 경우 금융·재정, 연구개발(R&D), 기업 지원, 고용 안정과 인프라 구축 등 848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해 위기 완화에 나선다.

금융·재정 분야로는 55억 8600만원을 들여 광양지역 철강산업이나 관련 중소·중견기업 95개사를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15억원의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주고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10억원 이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소상공인 대상 최대 70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도 대출해준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최대 5000만원의 특별보증도 지원한다.

기업 지원 분야에서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광양 111개사(21억 4300만원), 순천 29개 철강 관련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7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기업들의 경영난에 따른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자 안심 패키지' 사업을 통해 재직자 3000명을 대상으로 건강복지비(1인당 40만원)를 지급하는가 하면, 취업성공수당(1인당 150만원), 취업정착금(1인당 150만원) 등을 신규 취업자나 이·전직자에게 지원한다.

경영 부담을 줄이 소상공인 9000곳을 대상으로 4대 보험료와 공과금 등 공공요금(22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중장기적 대책으로는 친환경·첨단 철강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 구조 고도화와 기술 경쟁력 확보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양만권 철강산업의 위기는 지역 철강 산업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기업과 근로자, 지역경제를 잇는 체감할만한 대응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율 기자 dok2000@kwangju.co.kr



설 앞두고 축산물 특별점검

설 명절을 앞두고 돼지고기와 한우 등 축산물 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3일 광주 북구청 시장산업과 직원들이 유동의 한 식육판매점에서 원산지 표시와 위생관리 상태 등에 대해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

광천터미널 복합개발 공공기여금 1497억원 최종 확정

백화점·터미널 결합 35층 규모 '직주락 콤팩트시티' 2033년 완성

광주신세계가 추진하는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의 최대 관문이었던 공공기여금 규모가 149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구체적인 개발 청사진과 교통 대책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광주시 서구 광천동 일대를 업무·주거·문화가 접약된 '직주락(職住樂) 콤팩트시티'로 탈바꿈시키는 3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본궤도에 올랐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이날 '광천터미널 부지 개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고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공공기여금은 총 1497억 원으로 결정됐다. 당초 광주신세계 측이 제안했던 828억 원보다 1.8배 늘었다. 납부 방식은 현금 1368억 원과 현물 129억 원(지하도로 개설 등)으로 나뉜다.

확정된 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광천터미널 부지에는 기존 신세계백화점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철거

된 뒤, 자동차 정류장 부지 복합시설 부지 등 크게 두 구역으로 재편된다.

'자동차 정류장 부지'에는 백화점 신관과 함께 터미널 기능이 결합된 35층 규모의 빌딩이 들어선다. 기존 상장에 있던 승하차장과 대합실은 지하로 통합 배치해 환승 효율을 높인다. 지상부에는 대규모 쇼케인(Sunken) 광장, 650석 규모의 가변형 다목적 공연장, 200여 객실을 갖춘 5성급 호텔, 180m 높이 전망대 등이 조성된다.

'복합시설 부지'에는 주거·업무·교육 시설이 들어선다. 560여 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시설과 함께 건강증진센터, 종합병원 등 의료 시설이 배치된다. 특히 해외 학위와 연계된 국제학교와 AI 교육 기관, 신세계 직영 양로시설 등을 유통해 교육과 실버 복지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한 대책도 구체화됐다. 무진대로와 광천터미널을 직접 연결하는 길이 187m, 폭

12m(양방향 2차로)의 지하도로가 신설된다. 고속·시외버스는 물론 백화점과 호텔 이용 차량도 이 도로를 이용하게 돼 지상 교통량을 분산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신세계는 공공기여금(1497억 원)과는 별도로, 향후 추진될 도시철도 상무광천선 사업비 일부를 신세계 측이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광주시는 올 안으로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지구 단위계획을 수립·고시하고, 2026년 말 착공해 2033년 준공한다는 목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992년 개장 이후 호남 교통의 관문이었던 광천터미널이 시민의 삶과 문화, 업무가 어우러진 콤팩트 시티로 재탄생하게 됐다"며 "광주·전남 통합 생활권의 가장 역동적인 경제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5일 오전 시청에서 광주신세계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3조 원 규모의 투자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시·도 의회, 광주·전남 행정통합 동의안 오늘 처리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필수 절차인 시·도 의회 동의안이 4일 처리될 예정이다.

광주시의회는 341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일 본회 의를 열어 '광주시와 전라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전남도의회 역시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전남도 지사가 제출한 '전남도와 광주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30일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발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바꾸는 등의 경우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하는 규정에 의한 법적절차이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2월 중 국회 통과를 앞둔 특별법에는 그동안 양 시·도의회가 합의해 요구해온 통합의회 독립 예산 반영과 예산 편성권 강화, 특별시장이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통합의회의 허가·승인의 무화, 통합의회 사무기구의 규모 확대·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번 특별법에 반영되지 못한 광주시의회의 광주 지역구 의원 정족수 확대 요구와 전남도의회의 무안 주정사 지정, 통합의회 무안 소재, 광주 특례시 약정 삭제, 국립의대 설립 관련 특별법 반영 등 요구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전남광주 통합법 '무늬만 특례'

▶면에서 계속

대구경북안에 존재하는 강력한 '재정엔진'인 광역통합교부금이 전남광주안에는 누락돼 있다.

대구경북안 제60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10만분의 218)을 재원으로 하는 광역통합교부금을 신설해 특별시에 교부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매년 산식에 따라 달라지는 보통교부세와 달리, 국가 재정 총량에 연동되는 구조적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배어 있다.

하지만, 전남광주법안은 제44조에서 기존의 교부세 산정 특례를 10년간 보장해 주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통합 이후에도 전남광주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배분 결정에 목을 매야 하는 '전수답 재정'에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다.

지방채 발행 권한에서도 전남광주안은 보수적이다. 전남광주특별법 제46조는 지방채 발행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의회 재적의원과 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타 지역 법안들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스스로 포함시킨 것으로, 통합특별시가 가져야 할 '파격적 재정 자율권'과는 거리가 멀다.

일각에서는 전남광주, 충남대전 법안은 같은 당에서 발의한 법안인데 특례조항에서 차별적으로 비칠 수 있는 법안이 왜 나왔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 "30일 국회에 3개 법안이 동시에 발의되면서 '통합 경쟁'이 본격화됐으나, 전남광주특별법안은 '서울에 준하는 지위'라는 상정적 구호에만 매몰돼 실질적인 돈의 흐름을 규정하는 조문 설계에서 한계가 명확하다"며 "지금이라도 국세 교부 세목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으로 특정하고, 내국세 연동 교부금 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안의 재정 엔진을 전면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4 광주일보 74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틀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마로 45(신안동)
광주시 서구 서창2길 3(서창동)

분실공고

표준임대차계약서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506-3번지 일원 수완한국아펠리움타운 104동 1302호

임차인 : 송민아

위와 같이 분실공고함.

2026년 2월 4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헬스미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양자리 29-2

청산인 조희주

2026년 2월 4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헬스미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양자리 29-2

청산인 조희주

2026년 2월 4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헬스미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양자리 29-2

청산인 조희주

2026년 2월 4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헬스미